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407-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6 범죄인식조사]
범죄 대응에 대한 신뢰 수준과 처벌 인식

2026. 11. 25.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 평가와 경찰 대응 신뢰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 '잘하고 있다' 41%, '못하고 있다' 48%
2년간 이어진 긍정평가 상승세 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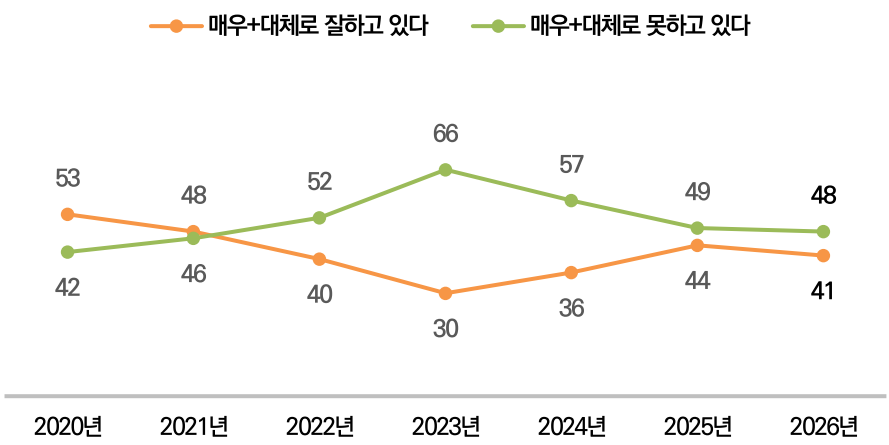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범죄 예방·관리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41%,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8%로, 부정적인 평가가 7%포인트 높다. 긍정평가는 2023년 30%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상승했으나, 올해에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현 정부 지지세가 강한 진보층(65%)과 전남광주/전북(59%)에서는 긍정평가가 과반이다. 반면 보수층(24%)과 대구/경북(27%)은 30%에 못 미친다. 진보층과 보수층의 격차는 지난해 31%포인트에서 올해 41%포인트로 커졌고,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지난해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다.

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볼수록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의 긍정평가는 17%로, 지난해(27%)보다 10%포인트 낮고 지역 범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50%)의 3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31%만 긍정적으로 평가해,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71%)과 40%포인트 차이가 난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 '잘하고 있다' 41%, '못하고 있다' 48%
2년간 이어진 긍정평가 상승세 제동

(단위 : %)



질문: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고: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매년 1회 조사. 2026년 조사 기간은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0대·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 10%포인트 이상 하락
진보층(65%)과 보수층(24%)의 긍정평가 격차 41%포인트, 지난해(31%포인트)보다 커져

(단위 : %, %p)

	잘하고 있다 (매우+대체로)			못하고 있다 (매우+대체로)		
	2025년	2026년	차이 (26년 – 25년)	2025년	2026년	차이 (26년 – 25년)
전체	**44**	**41**	**–3**	**49**	**48**	**–1**
연령						
18–29세	33	28	–5	53	57	+4
30대	40	25	–15	52	61	+9
40대	50	49	–1	45	41	–4
50대	54	52	–2	42	36	–6
60대	39	49	+10	53	46	–7
70세 이상	42	39	–3	52	53	+1
지역						
서울	41	37	–4	52	50	–2
인천/경기	47	42	–5	47	47	0
대전/세종/충청	36	36	0	55	51	–4
전남광주/전북	60	59	–1	33	30	–3
대구/경북	38	27	–11	55	69	+14
부산/울산/경남	38	42	+4	54	48	–6
강원/제주	45	56	+11	46	36	–10
이념성향						
진보층	62	65	+3	33	23	–10
중도층	42	40	–2	49	46	–3
보수층	31	24	–7	63	71	+8
지역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27	17	–10	70	78	+8
심각하지 않다	49	50	+1	45	41	–4
모르겠다	22	27	+5	50	45	–5
우리나라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36	31	–5	58	60	+2
심각하지 않다	67	71	+4	28	21	–7
모르겠다	36	27	–9	23	25	+2

질문: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고: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8. //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 32%,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 65%
2·30대 여성은 10명 중 1명 정도만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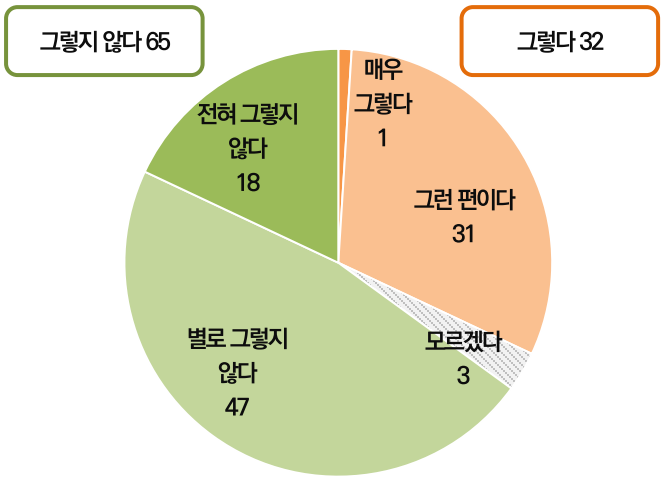
범죄 피해를 당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경찰이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피해를 신고하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2%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65%)은 그 두 배에 이른다. '매우 그렇다'는 1%에 불과해 경찰 대응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별·세대와 관계없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28%)이 남성(37%)보다 낮고, 30대(19%)의 평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부정적이다. 경찰 대응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은 2·30대 여성이다. 18-29세 여성은 10%, 30대 여성은 13%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18-29세 남성(40%)과 비교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의 신뢰는 4분의 1 수준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3%)이 중도층(33%), 보수층(24%)보다 경찰 대응을 더 신뢰한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41%)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28%)이 가장 낮다. 정부 정책 평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 지지세가 강한 진보층과 전남광주/전북에서 경찰을 신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찰 대응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범죄정책 평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정부가 범죄 예방·관리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47%가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못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22%만 그렇게 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절반 이상(51%)은 경찰 대응을 신뢰하지 않는다.

(단위 : %)

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 32%,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 65%



질문: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경찰 대응에 대한 신뢰, 여성(28%)과 30대(19%)에서 특히 낮아
18-29세 여성은 10%만 '제대로 대응할 것', 같은 연령대 남성(40%)의 4분의 1 수준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그런 편)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별로)	모르겠다
전체	(1,000)	1	31	32	47	18	65	3
성별								
남자	(494)	2	35	37	43	18	60	2
여자	(506)	1	27	28	52	18	69	3
연령								
18-29세	(147)	0	25	25	48	23	71	4
30대	(151)	1	18	19	40	35	76	5
40대	(168)	2	32	34	43	19	62	4
50대	(192)	3	38	41	46	11	58	2
60대	(180)	1	36	37	51	11	62	1
70세 이상	(162)	2	33	35	54	11	64	0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75)	0	40	40	37	15	53	7
여자_18-29세	(72)	0	10	10	59	31	90	0
남자_30대	(79)	2	22	24	39	33	73	4
여자_30대	(72)	0	13	13	42	38	79	7
남자_40대	(86)	4	37	41	38	20	57	2
여자_40대	(82)	0	27	27	49	18	67	6
남자_50대	(97)	3	38	42	43	15	57	1
여자_50대	(95)	2	38	40	50	8	58	2
남자_60대	(88)	1	39	40	47	11	58	1
여자_60대	(92)	1	33	34	54	11	65	1
남자_70세 이상	(69)	1	34	35	52	12	65	0
여자_70세 이상	(93)	3	32	35	55	10	64	1
지역								
서울	(186)	2	30	32	44	20	65	3
인천/경기	(325)	1	32	32	47	17	64	4
대전/세종/충청	(108)	1	31	33	48	17	65	3
전남광주/전북	(96)	2	39	41	46	14	59	0
대구/경북	(97)	0	30	30	52	16	68	2
부산/울산/경남	(147)	2	26	28	48	22	70	2
강원/제주	(41)	5	34	39	42	17	60	2
이념성향								
진보층	(278)	3	39	43	46	10	55	2
중도층	(355)	1	32	33	44	21	64	3
보수층	(330)	0	24	24	52	22	73	2
정부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3	44	47	44	7	51	3
못하고 있다	(480)	0	21	22	49	29	77	1
모르겠다	(107)	2	25	26	54	11	64	9

질문: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범죄 발생 원인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 59%가 '약한 처벌 수준' 꼽아
'수사·검거 등 범죄 대응의 미흡', '온라인 익명성으로 늘어난 디지털 범죄 기회'가 뒤를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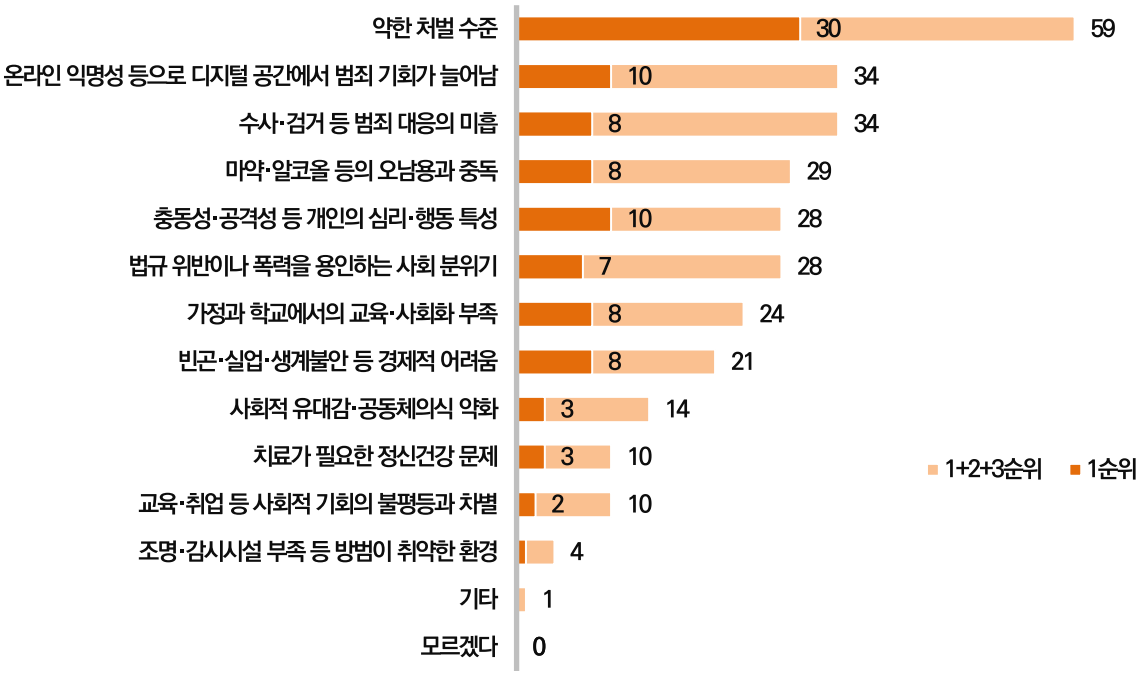
사람들은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을 꼽는다. 전체 응답자의 59%가 이를 골랐다(1+2+3순위 기준). 1순위로 꼽은 사람도 30%로 다른 요인들의 세 배 수준이다.

그다음은 '수사·검거 등 범죄 대응의 미흡(34%)'과 '온라인 익명성 등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 기회가 늘어남(34%)'이다. 이어 '마약·알코올 등의 오남용과 중독(29%)', '충동성·공격성 등 개인의 심리·행동 특성(28%)', '법규 위반이나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28%)',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사회화 부족(24%)' 순이다.

처벌과 수사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응 부족을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빈곤·실업·생계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21%)', '사회적 유대감·공동체의식 약화(14%)', '교육·취업 등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10%)'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꼽혔다.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 59%가 '약한 처벌 수준' 꼽아
'수사·검거 등 범죄 대응의 미흡', '온라인 익명성으로 늘어난 디지털 범죄 기회'가 뒤를 이어

(단위 : %)



질문: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음 중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0대 이하는 10명 중 7명이 '약한 처벌 수준'을 범죄 발생 요인으로 지목
30대 이하는 '수사·검거 미흡'을 꼽은 사람도 절반가량

'약한 처벌 수준'은 모든 연령대에서 범죄 발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만 40대 이하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이를 꼽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절반에 못 미친다. '수사·검거 미흡'도 18-29세(46%)와 30대(49%)는 절반 가까이가 언급했지만 50대 이상은 24~30%다. 반면 60대는 '마약·알코올 중독(39%)'과 '충동성·공격성(38%)'을 꼽은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젊은 층은 처벌과 수사 등 제도의 문제를 강조하는 반면, 고령층은 여기에 더해 개인과 환경의 문제에도 무게를 둔다. 성·연령별로는 18-29세 여성이 '약한 처벌 수준(81%)'과 '수사·검거 미흡(57%)'을 꼽은 비율이 모든 성·연령대 중 가장 높다.

'수사·검거 미흡'은 경찰 대응에 대한 신뢰와 범죄 인식에 따라서도 크게 갈린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2%가 이 요인을 꼽아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18%)의 두 배를 넘는다.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56%가 '수사·검거 미흡'을 꼽아,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29%)의 두 배에 가깝다.

'온라인 익명성'이 '수사·검거 미흡'과 함께 주요 범죄 발생 요인으로 꼽힌 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촬영·유포·보이스피싱과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과도 이어진다. '마약·알코올 중독'을 꼽은 사람도 29%로 적지 않은데, 이 역시 마약범죄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 82%에 이르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

40대 이하는 10명 중 7명이 '약한 처벌 수준'을 범죄 발생 요인으로 지목
30대 이하는 '수사·검거 미흡'을 꼽은 사람도 절반가량

(단위 : %)

1+2+3순위 응답	사례수 (명)	약한 처벌 수준	수사·검거 등 범죄 대응의 미흡	온라인 익명성 등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 기회가 늘어남	마약·알코올 등의 오남용과 중독	충동성·공격성 등 개인의 심리·행동 특성	법규 위반이나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사회화 부족	빈곤·실업·생계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유대감·공동체 의식 약화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	교육·취업 등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	조명·감시 시설 부족 등 방범이 취약한 환경	기타	모르겠다
전체	(1,000)	59	34	34	29	28	28	24	21	14	10	10	4	1	0
연령															
18-29세	(147)	70	46	28	14	20	34	29	18	11	12	5	6	2	0
30대	(151)	74	49	26	25	18	28	25	11	12	11	7	6	3	0
40대	(168)	68	36	36	24	27	30	17	17	14	7	9	4	1	1
50대	(192)	56	24	38	33	31	27	21	24	17	9	13	4	1	0
60대	(180)	48	24	35	39	38	27	29	28	13	9	9	0	0	0
70세 이상	(162)	43	30	37	35	33	25	23	25	17	14	13	5	0	0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75)	59	34	30	17	23	23	38	26	16	9	8	8	4	0
여자_18-29세	(72)	81	57	27	11	18	46	20	9	6	15	2	3	0	0
남자_30대	(79)	77	49	21	24	22	26	25	10	15	13	9	4	2	0
여자_30대	(72)	71	49	31	27	13	30	25	12	8	9	6	9	4	0
남자_40대	(86)	70	36	34	27	27	33	18	18	16	4	5	4	2	0
여자_40대	(82)	66	36	37	20	28	27	16	17	13	10	13	3	0	2
남자_50대	(97)	58	28	39	33	29	31	14	23	18	4	17	4	1	0
여자_50대	(95)	53	21	37	33	32	23	28	26	16	15	10	4	0	0
남자_60대	(88)	47	23	36	41	32	23	26	33	15	11	13	0	0	0
여자_60대	(92)	50	26	33	36	44	30	32	24	11	7	5	0	0	0
남자_70세 이상	(69)	46	36	33	29	28	22	26	26	22	10	16	5	0	0
여자_70세 이상	(93)	41	25	39	39	37	26	21	24	14	17	10	5	0	0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55	19	39	29	34	25	26	22	18	12	13	4	1	0
못하고 있다	(480)	63	49	27	31	23	32	22	19	11	9	7	3	1	0
모르겠다	(107)	59	27	39	18	34	26	26	24	13	10	7	6	1	1
우리나라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689)	62	39	30	30	27	30	24	19	11	10	8	4	1	0
심각하지 않다	(266)	53	22	42	27	32	23	24	24	22	11	14	4	1	0
모르겠다	(45)	52	30	34	23	25	30	18	33	14	15	9	4	0	2

질문: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음 중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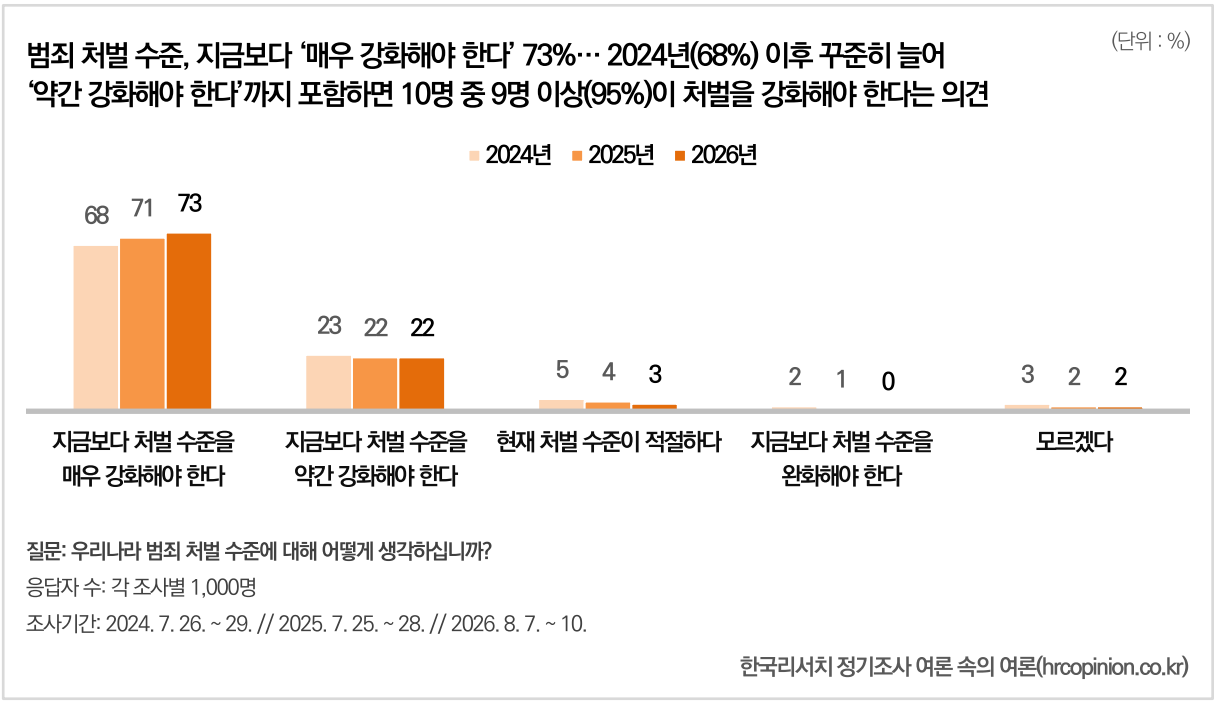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범죄자 처벌 수준 평가와 범죄 처벌의 목적

범죄 처벌 수준, 지금보다 '매우 강화해야 한다' 73%… 2024년(68%) 이후 꾸준히 늘어 '약간 강화해야 한다'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9명 이상(95%)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이 꼽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크다. 전체 응답자의 73%가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24년 68%, 지난해 71%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약간 강화해야 한다(22%)'까지 더하면 처벌 강화를 원하는 사람은 95%에 이른다. '현재 처벌 수준이 적절하다'는 3%이고, '완화해야 한다'는 1%에도 못 미친다.



질문: 우리나라 범죄 처벌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29. // 2025. 7. 25. ~ 28. //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범죄자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응보', '재범 방지', '사회 보호', '규범 강화' 등의 순

사람들은 처벌로 무엇을 이루고자 할까? 범죄자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응보)'이 40%로 가장 많다(1+2순위 기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재범 방지, 38%)'과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함(사회 보호, 37%)'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는다. 이어 '법과 사회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각인시킴(규범 강화, 32%)',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함(예방, 24%)' 등의 순이다. 1순위만 보면 응보(26%)가 재범 방지(18%), 사회 보호(16%), 규범 강화(16%)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

'범죄 피해자를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함(피해 회복, 14%)'과 '범죄자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킴(교정과 재활, 12%)'을 꼽은 사람은 소수다. 처벌을 범죄자 교정보다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세하다.

범죄자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응보', '재범 방지', '사회 보호', '규범 강화' 등의 순

(단위 : %)



질문: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령대에 따라 처벌의 목적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30대는 52%가 '응보(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를 꼽았다. 응보를 꼽은 비율이 과반인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하다. 30대는 '범죄자 격리(45%)'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지만, '재범 방지'는 25%로 가장 낮다. 반면 60대(46%)와 70세 이상(43%)에서는 '재범 방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정과 재활'을 꼽은 비율도 60대와 70세 이상은 각각 16%, 19%인 반면 18-29세(8%)와 30대(6%)는 한 자릿수이다. 반대로 '피해 회복'은 18-29세(22%)와 30대(20%)가 60대(6%), 70세 이상(10%)의 두 배 이상이다. 젊은 층은 범죄자가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가 회복되는 것을, 고령층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6%가 '응보'를 꼽아,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31%)보다 15%포인트 높다. 반대로 경찰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범 방지(44%)'와 '교정과 재활(20%)'을 꼽은 비율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36%, 8%)보다 높다.

범죄자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 30대에서는 52%가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60대(46%)·70세 이상(43%)에서는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많아

(단위 : %)

1+2순위 응답	사례수 (명)	응보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	재범 방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	사회 보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함)	규범 강화 (법과 사회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각인시킴)	예방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함)	피해 회복 (범죄 피해자를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함)	교정과 재활 (범죄자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킴)	기타	모르겠다
전체	(1,000)	40	38	37	32	24	14	12	1	1
성별										
남자	(494)	41	38	36	29	25	13	13	1	1
여자	(506)	39	38	38	35	22	15	10	1	1
연령										
18-29세	(147)	44	41	31	33	15	22	8	2	1
30대	(151)	52	25	45	28	18	20	6	1	2
40대	(168)	41	38	39	28	24	16	8	0	2
50대	(192)	40	35	32	36	32	11	12	0	0
60대	(180)	30	46	39	34	26	6	16	1	1
70세 이상	(162)	37	43	36	32	22	10	19	0	0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33	41	40	29	25	12	16	1	1
못하고 있다	(480)	46	36	35	35	23	16	8	0	0
모르겠다	(107)	42	36	38	30	22	12	10	2	3
우리나라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689)	44	38	38	32	23	14	10	1	1
심각하지 않다	(266)	33	41	34	32	27	13	17	1	1
모르겠다	(45)	37	26	46	29	15	20	10	0	8
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 대응										
제대로 대응할 것	(325)	31	44	36	29	27	12	20	0	0
제대로 대응 못할 것	(650)	46	36	37	34	22	14	8	1	1
모르겠다	(26)	24	25	40	29	21	21	5	0	15

질문: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주요 감형 사유별 적절성 평가

과반이 공감한 감형 사유는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67%)' 하나뿐
'미성년자', '사회적 지위' 등 피의자의 개인적 특성은 감형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처벌 강화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현행법은 여러 감형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정할 때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형법 제51조).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형법 제53조). 법에 명시된 감형 사유에 사람들은 얼마나 공감할까?

제시한 15개 사유 중 과반이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고 본 것은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 하나뿐이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2024년(66%)과 지난해(70%)에 이어 3년 연속 유일하게 과반의 공감을 얻었다. 남성(72%)이 여성(63%)보다 높지만, 성별·연령·이념성향별로 모두 과반이 동의한다.

그다음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44%)'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33%)'이다. 두 사유 모두 지난해(44%, 34%)와 같거나 비슷하다. 다만 성별 차이가 크다. 자백·수사 협조는 남성 52%, 여성 36%가, 합의는 남성 43%, 여성 23%가 적절하다고 답해 각각 16%포인트, 20%포인트 차이가 난다. 남녀 차이는 18-29세에서 두드러진다. 18-29세 남성은 과반이 자백(60%)과 합의(59%)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은 각각 29%, 28%에 그친다.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25%)',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름(초범, 21%)',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임(17%)' 등 범행 상황이나 범행 후 태도와 관련된 다른 사유에 대한 공감은 30%를 넘지 않는다. 특히 '범행 당시 음주, 약물중독 상태임'을 적절한 감형 사유로 보는 사람은 6%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 이상(92%)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만 71%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형 근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약·알코올 등의 오남용과 중독을 범죄 원인으로 꼽은 사람도 29%로 적지 않다. 음주나 약물을 처벌을 덜어줄 이유가 아니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피의자의 개인적 특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데에는 더 부정적이다.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큼(23%)', '생활형편이 빈곤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함(18%)', '평소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16%)', '신체장애가 있음(16%)',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12%)'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이 25%에 못 미친다. 올해 새로 물은 '고령자임(11%)'과 '미성년자임(9%)'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는 88%가 감형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만 56%다.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년법 제59조). 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데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회적 지위가 높음'은 4%만 적절하다고 답해 15개 사유 중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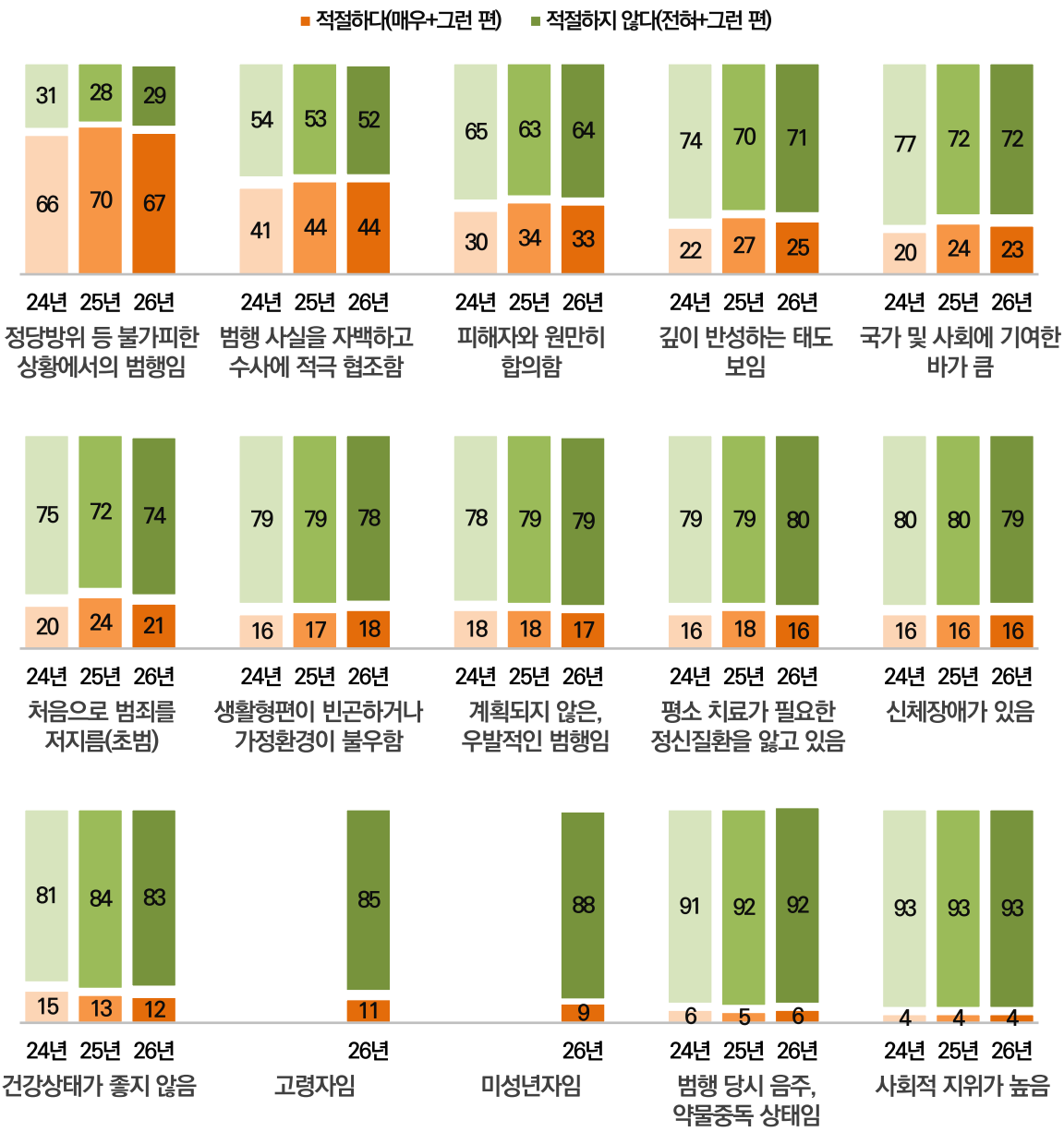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감형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다. 15개 사유에 대한 '적절하다' 응답 평균은 남성 25%, 여성 18%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6%)과 60대(25%)가 상대적으로 높고, 30대는 '반성하는 태도(10%)', '초범(12%)', '우발적 범행(9%)'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유에서 가장 엄격하다. 성·연령별로는 30대 여성(12%)과 18-29세 여성(13%)이 가장 엄격하고, 18-29세 남성(28%)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두 배를 넘는다.

정당방위를 빼면 자백과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처럼 실제 재판에서 흔히 고려되는 사유도 절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처벌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이 받아들이는 감형의 폭은 현행 사법 체계가 허용하는 폭보다 훨씬 좁다.

과반이 공감한 감형 사유는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67%)' 하나뿐, 3년 연속 '사회적 지위' 등 피의자의 개인적 특성은 감형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단위 : %)

피의자가 …인 경우, 감형 사유로…



질문: 다음 각각이 감형 사유(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이유)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 '미성년자임', '고령자임'은 2026년 신규 항목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29. // 2025. 7. 25. ~ 28. //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자백', '합의'가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는 의견, 남성이 여성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아
18-29세 남성은 과반이 '자백(60%)', '합의(59%)'를 인정하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은 30% 미만

(단위 : %)

피의자가 …인 경우,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	사례수 (명)	범행 관련 상황 및 범행 후 태도 관련 요인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	범행 사실 자백, 수사에 적극 협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처음으로 범죄 저지름 (초범)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범행	범행 당시 음주, 약물중독 상태
전체	(1,000)	67	44	33	25	21	17	6
성별								
남자	(494)	72	52	43	28	27	20	6
여자	(506)	63	36	23	21	16	15	5
연령								
18-29세	(147)	77	45	44	24	13	10	7
30대	(151)	63	36	29	10	12	9	4
40대	(168)	67	49	33	20	22	16	4
50대	(192)	61	38	27	27	20	22	4
60대	(180)	68	49	30	31	28	26	7
70세 이상	(162)	70	50	36	34	30	19	7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75)	80	60	59	35	24	15	12
여자_18-29세	(72)	73	29	28	13	2	5	2
남자_30대	(79)	71	43	47	10	14	8	4
여자_30대	(72)	55	28	11	9	10	11	4
남자_40대	(86)	70	60	45	25	31	22	6
여자_40대	(82)	64	37	21	15	13	9	2
남자_50대	(97)	71	43	34	30	26	23	3
여자_50대	(95)	51	32	20	23	15	21	6
남자_60대	(88)	70	53	37	35	29	28	3
여자_60대	(92)	65	45	24	28	28	24	10
남자_70세 이상	(69)	67	57	37	34	39	23	7
여자_70세 이상	(93)	72	45	34	35	24	15	7
우리나라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689)	66	40	29	22	18	14	6
심각하지 않다	(266)	69	53	41	33	30	26	6
모르겠다	(45)	76	58	46	22	22	19	2
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 대응								
제대로 대응할 것	(325)	72	54	42	37	33	27	9
제대로 대응 못할 것	(650)	66	40	28	19	16	13	4
모르겠다	(26)	57	32	32	17	5	11	8

질문: 다음 각각이 감형 사유(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이유)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적절하다(매우 적절하다+적절한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피의자의 개인적 특성을 감형 사유로 보는 의견은 성별·연령대와 관계없이 낮아
30대는 '사회 기여(14%)'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0% 이하…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아

(단위 : %)

피의자가 …인 경우, 감형 사유로 적절하다	사례수 (명)	범죄피의자의 개인적 특성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큼	생활형편 빈곤, 가정환경 불우	평소 치료 필요한 정신질환 앓음	신체장애 있음	건강상태 좋지 않음	고령자	미성년자	사회적 지위 높음
전체	(1,000)	23	18	16	16	12	11	9	4
성별									
남자	(494)	30	22	19	19	13	13	11	5
여자	(506)	16	13	13	14	11	9	8	3
연령									
18-29세	(147)	16	13	17	13	8	6	12	1
30대	(151)	14	10	7	8	4	4	6	1
40대	(168)	26	20	12	15	13	10	8	5
50대	(192)	25	16	16	14	13	15	7	4
60대	(180)	27	22	21	24	14	16	13	6
70세 이상	(162)	25	23	23	21	20	15	11	5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75)	22	23	25	18	12	9	20	2
여자_18-29세	(72)	9	3	9	7	3	2	4	0
남자_30대	(79)	19	15	6	8	3	3	6	1
여자_30대	(72)	10	5	9	8	5	5	6	1
남자_40대	(86)	39	28	14	21	17	14	10	7
여자_40대	(82)	13	10	9	9	8	6	7	2
남자_50대	(97)	31	19	21	19	14	18	7	6
여자_50대	(95)	18	13	10	9	12	12	7	2
남자_60대	(88)	30	19	24	24	12	19	11	7
여자_60대	(92)	24	24	18	23	15	13	14	6
남자_70세 이상	(69)	36	32	27	20	19	16	12	6
여자_70세 이상	(93)	17	17	20	22	21	14	11	5
우리나라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689)	19	16	15	15	11	11	8	3
심각하지 않다	(266)	31	23	20	20	15	12	13	6
모르겠다	(45)	30	12	12	12	12	14	4	2
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 대응									
제대로 대응할 것	(325)	33	23	26	24	18	19	18	8
제대로 대응 못할 것	(650)	18	15	12	12	9	8	5	2
모르겠다	(26)	8	14	5	12	13	4	9	0

질문: 다음 각각이 감형 사유(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이유)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적절하다(매우 적절하다+적절한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범죄자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5%이고,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73%로 4명 중 3명에 가깝다. 우리나라 범죄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했지만, 엄벌 요구는 오히려 커졌다. 범죄 대응에 대한 평가는 낮다.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사람은 32%에 그치고,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사람들은 범죄의 원인을 형사사법 체계의 대응에서 찾는다. 범죄 발생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59%)'이 가장 많이 꼽혔고, '수사·검거 등 범죄 대응의 미흡(34%)'이 뒤를 잇는다. 한편 처벌에 기대하는 역할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데 가깝다. 처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보(40%)', '재범 방지(38%)', '사회 보호(37%)'가 비슷하게 꼽혔고, 사회 보호는 지난해(32%)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피해 회복(14%)'과 '교정과 재활(12%)'은 소수다.

감형에 대한 여론과 현행법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15개 감형 사유 중 과반이 적절하다고 본 것은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67%)' 하나뿐이다. 재판에서 흔히 고려되는 자백·수사 협조(44%), 피해자와의 합의(33%), 반성하는 태도(25%)도 절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음주·약물중독 상태(6%)와 미성년자(9%)를 감형 사유로 보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불신과 엄벌 요구가 가장 뚜렷한 집단은 2·30대 여성이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응답은 18-29세 여성 10%, 30대 여성 13%로 가장 낮고, 처벌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88%, 82%)은 가장 높다. 15개 감형 사유에 대한 '적절하다' 응답 평균도 12~13%로 가장 엄격하다. 이들은 범죄 걱정으로 외출이나 활동을 줄인 경험이 가장 많은 집단이기도 하다. 30대 여성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사회 보호)을 처벌의 목적으로 꼽은 비율도 47%로 모든 성·연령대 중 가장 높다. 수사기관의 대응을 믿지 못하는 만큼, 처벌을 통해 범죄자를 일상에서 떼어놓는 데 더 큰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7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4,548명, 조사참여 1,636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 참여대비 61.1%)
조사일시	• 2026년 8월 7일 ~ 8월 1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